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안 번호	7521
----------	------

제안연월일 : 2025. 1.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
위법전용한 의혹과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2.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레이더식 돌발상황 감지시스템’, ‘다봄
CCTV’, ‘도로전광표지판(VMS) 기술개발제품’ 관련 성능불량, 성능조
작, 부실준공검사, 전·현직 직원 및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에 관한 감
사

제안이유

1.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위법전용한 의혹과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2022년 6월 1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참석”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를 주민 400여 명을 초대하여 진행했다고 발표함. 그런데, 2022년 6월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작성한 ‘용산공원 개방행사 추진보고’에 따르면, 용산공원 개방행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을 국민정원으로 조성하여 임시개방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 기획, 이를 위해 대행사를 선정하는 계약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 대행용역’(주앤다 수주)과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 대행용역’(올댓캠퍼스 수주) 두 건을 발주함. (주앤다가 수행한 ‘용산공원 시범개방행사’는 국토부 주관으로 정상 진행되었으나, ‘지역주민 어울림행사(가칭)’는 용산공원 개방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최한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의 위장용역이었음.

대통령실 주민초대 행사는 대통령실 자체 행사이며, 이것과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는 근접 장소일 뿐 전혀 관련 없는 행사로 이는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이 정한 사업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써 국토부장관이 위법하게 행사를 수행했으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하여 위증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이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함.

한편,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청행사’를 대행한 ‘올댓캠퍼스’는 이 행사 이후 곧바로 2022년 7월 14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용산공원 조성과 임시개방을 운영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용산공원 임시개방부지 관리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뒤 이 관리운영 방안 용역이 채 끝나기 전인 2022년 8월 19일에 LH로부터 ‘반환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대행 용역’을 수주하였는데, ‘올댓캠퍼스’가 수주한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1) 올댓캠퍼스가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과업지시가 결정되는 ‘관리 운영 대행 용역’의 핵심적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2) 올댓캠퍼스는 ‘행사대행’업체로 ‘관리운영 대행’을 하기에는 ‘시설관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동년 8월 16일 ‘사전 규격공고(자격)’가 나오자마자 이튿날인 8월 17일부로 이벤트업체였던 ‘올댓캠퍼스’가 법인 사업 목적에 “건물관리, 시설관리업”을 추가함. 그러나, 자격을 입증할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LH는 1인 수의계약으로 계약함

3) 1인 수의계약 과정보다 입찰한 1개 업체는 스스로 입찰을 포기하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르고 들어간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폭로한 바 있음. 이렇듯 용산공원 반환 부지 임시개방 관리운영 위탁은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진행된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함.

2.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레이더식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다봄 CCTV’, ‘도로전광표지판(VMS) 기술개발제품’ 관련 성능불량, 성능조작, 부실준공검사, 전·현직 직원 및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에 관한 감사

한국도로공사는 레이더식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서와 다르게 성능평가 검지거리를 임의로 축소해 검지율을 측정하거나 성능평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검지거리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능평가를 조작하여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급하였으며, 부실준공검사를 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짐.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메타빌드(주)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직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야간, 새벽, 악천후에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다봄 CCTV(야간 초저조도 카메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봄 CCTV

는 사업의 목적과 달리 일반 CCTV와 뚜렷한 차이점이 없고, 야간에도 차량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는 등 성능에 대한 불량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다봄 CCTV를 납품한 업체들의 경우 개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에서부터 제품사양, 제품 안내서 등이 하나의 제품인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됨. 더불어 한국도로공사는 시방서 변경 및 성능검증 시험 기준 등을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전·현직 직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전광표지판(VMS) 기술개발제품 사업 관련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한국도로공사 자체 감사를 통해 계약서상 기술개발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나 부품 등을 납품 및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는 사전현장조사 및 준공검사 등을 통해 부정납품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준공 허가한 책임이 있음.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 조치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짐. 더욱이, 도로전광표지판 기술개발제품 대부분이 실제로는 해당기술개발제품과 다른 제품이 설치되거나,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만연한 부정납품 배경에는 한국도로공사 전·

현직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